

전공의 파업 불똥 튄 간호인력들...노조 “모든 업무 떠넘기나”

상급 종합 병원 노조, 정부 발표에도 불안감 여전 “항구적 전공의 부재 상정...간호 인력에 과한 업무”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위를 보호하는 시범 사업에 나섰으나 일선 현장에서 불안감이 여전하다.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휘날리며 28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직원들이 3·1절 105주년을 앞두고 태극기를 흔들며 주권 실현을 위한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불가피하게 전공의 영역과 겹치는 일부 의료 행위를 이어온 간호 인력들은 과다 업무 방지 명분화를, 정부를 향해 확실한 의료 행위 범위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한 상급 종합 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병원 측에 정부 시범 사업과 관련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논의를 요구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업무를 간호 인력이 대신하며 업무 영역이 확대된 상황에 구체적인 가능 업무를 확정짓자는 것이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른바 PA간호사 등으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어 PA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했고 불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정부 시범 사업에 따라 병원 측이 항구적인 전공의 부재 상황을 상정하고 간호 인력에 과한 업무를 지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가피하게 전공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일부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 측이 이를 시범 사업 테두리 안에서 명문화해 고유 업무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재중인 전공의 고유의 영역을 이어받는 것은 떠넘기기와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립병원은 병원과 간호부가 논의를 마치면 노조가 따르라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의료 행위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제해선 안된다”며 “보건부도 병원과 노조가 구두도라도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

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진료 지원 보장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시범 사업에 따라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은 의료기관장이 설치하는 위원회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의 아래 정해진다.

그러나 의료 행위 보장 범위가 병원 자체적으로 정해지는데 따라 이번 발표가 정부가 책임을 병원 또는 직원들에게 돌리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관중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의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약속 없는 현장 혼란이 여전할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 의료 행위 부담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수권기자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85% 동맹휴학 동참...3월초까지 무더기 유급 불가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광주·전남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에 동참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단 각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며 학사 일정을 연기했으나, 3월 초까지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유급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2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재학생 732명 중 78.5%에 해당하는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집단행동 첫날인 지난 20일 281명, 이튿날인 21일 282명에 이어 22일 이후 전날까지 12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했다.

조선대 의대 역시 정원 625명 중 90%를 훌쩍 뛰어넘는 600여 명이 휴학 신청했다.

광주·전남에서 의대를 둔 대학 2곳을 통틀어 의대생 정원 1357명 중 85%가 넘는 1170여 명이 동맹 휴학에 나선 셈이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안 반발과는 무관한 개인 사유, 학과과정 미이수 등을 이유로 든 학생만 휴학계를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휴학계는 일단 반려하되, 차례로

개인 상담을 한다. 강의 파행 우려가 큰 만큼 학사 일정을 대부분 연기했다.

전남대 의대는 이날 19일 개강했지만 학사 일정을 2주가량 연기하면서 다음 달 6일부터 각 교과목 강의가 재개된다. 조선대 의대도 다음 달 4일 개강에 앞서 예정됐던 임상 실습 등 수업 일부를 미뤘다.

3·1절 연휴가 끝난 뒤에도 의대생들이 휴학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무단 결석 등으로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 동맹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국 의대 학생회 협의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와 대학 당국 양측을 향해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표명하라”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어서 전망마저 어둡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해 각 대학에 정원 신청을 요구한 상태다. 의대 확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신청 연기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거부했다. 이슬비기자

현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위한...“남아선호 쇠퇴”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과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을 당시에는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 자체에 낙태의 개연성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용일기자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2024. FRI-SUN 2.23.-3.3.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